

# 정책브리핑



정책브리핑 | 2022-25호 | 2022년 10월 5일 | 발행처 민주연구원 | 발행인 노웅래 | idp.theminjoo.kr

## 위기의 가계부채, 특단의 가계지원 대책을 마련하라

남 국 현 연구위원(경제학 박사)

### 《 요약 》

#### ■ 가계부채 현황

- 가계대출은 2020년 1분기 1,612조 원에서 2022년 2분기 1,869조 원으로 16.1% 상승
- 기준금리는 2020년 0.5%에서 2022년 2.5%로 7회에 걸쳐 연속인상
  -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과 신용위험이 커지고, 저소득층은 채무불이행 우려
-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%로 OECD 34개국 가운데 7위로 높은 수준임

#### ■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 및 문제점

-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소득 1분위 4배, 2분위 2.8배로 저소득층은 위험수준
  - 전국 고위험 가구수는 3,305천 가구로 추산되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
  - 저소득층은 생활비, 부채상환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
  - 부채상환에 대해 '기한유예'나 '상환불가능'한 고위험가구는 1,044천 가구로 추산
  - 저소득층은 원리금상환을 위해 식품·외식비 지출을 크게 줄여 소비감소와 경기침체 우려

#### ■ 정책제언

- 금리폭리방지법(금리원가 공개)을 통한 은행법 일부개정으로 금리인하 유도
- 불법사채금지법 개정으로 금융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부담 해소
- 금리자동인하법 개정을 통한 채무자의 권리보호 및 금리인하 자동 처리
-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고위험 가구의 저금리 대환 대출 대규모 실행
-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로 금융지원책 마련
- 저소득층에서 생활비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가구를 위한 생계비 지원 시스템 마련
- 저소득층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 발굴과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

#### ▶ 키워드: 가계부채, 고위험가구

♣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,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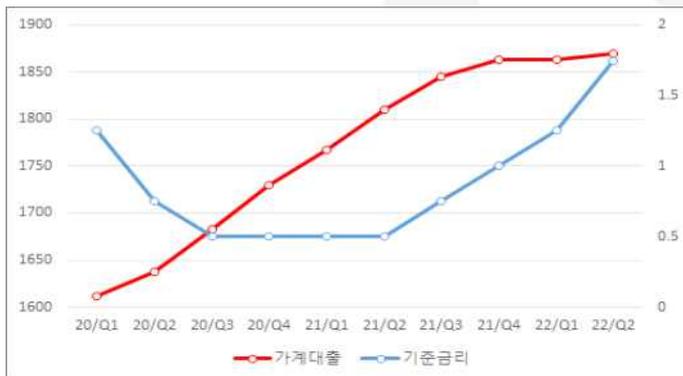
# 1. 가계부채 현황

○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%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, 소득 분위별로 1분위 401%, 2분위 278%, 3분위 239%로 저소득층은 더욱 위험한 수준에 있음

## ○ 기준금리와 가계대출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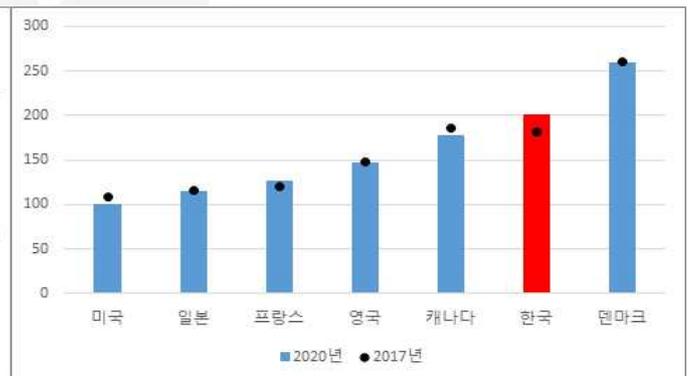
- <그림 1>을 보면 기준금리는 20년 1월 1.25%에서 5월 0.5%로 최저로 하락한 이후 21년 7월까지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22년 9월 2.5%로 급격히 상승함
  - 20년 코로나19 확대로 글로벌 경기둔화와 기업 및 가계지원 등 경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
  - 최근 물가상승, 환율인상, 한미 기준금리 역전 등 우려로 7회에 걸쳐 기준금리 연속인상
- 가계대출은 20년 1분기 1,612조 원에서 매분기 1.7%씩 증가하여 22년 2분기 1,869조 원으로 16.1% 상승하였고, 21년 3분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상승세가 둔화됨
- 21년 4분기 이후 가계대출이 안정화된 것은 재정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,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승세가 감소한 것은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
  - 금리인상으로 가계 이자부담과 신용위험이 커지고, 특히 저소득층은 채무불이행이 우려됨
- 금리인상의 충격이 소득분위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

<그림 1> 기준금리 및 가계대출(단위: %, 조 원)



자료: 한국은행

<그림 2> 주요국의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(단위: %)



자료: OECD

## ○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

- <그림 2>를 보면,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%(2020년 기준)로 OECD 34개국 가운데 7위로 조사되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
  - 가계부채 비율: 덴마크 259%, 캐나다 177%, 영국 148%, 프랑스 127%, 일본 115%, 미국 101%
-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3년 전 대비 10.4%가 증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
  - 가계부채 증가율: 덴마크 -0.6%, 캐나다 -4.9%, 영국 0.4%, 프랑스 5.9%, 일본 0.2%, 미국 -6.8%

## 2.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 및 문제점

### ○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및 고위험가구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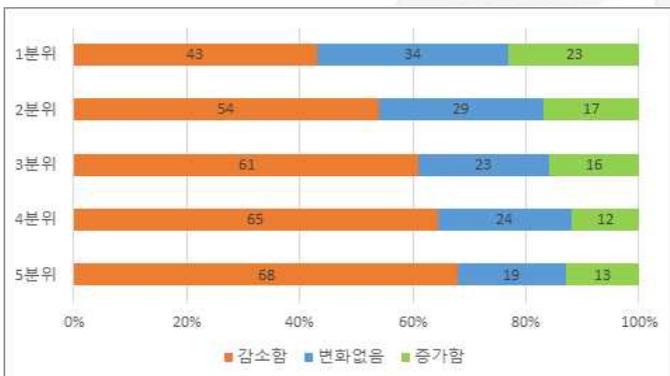
-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소득분위별로 1분위 4배, 2분위 2.8배, 3분위 2.4배 순으로 나타나,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계부채가 높지만 특히 저소득층은 위험한 수준에 있음
  - 3년 전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: 1분위 7.9%, 2분위 14.1%, 3분위 13.1%, 4분위 14%, 5분위 3.2%
- 고위험가구는 1분위 45.8%, 2분위 32.5%, 3분위 25.6%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, 저소득가구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,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고위험가구 증가
- <표 1>에서 조사한 고위험가구 비율을 바탕으로 전국 가구수로 환산하면 전국 고위험가구 수는 3,305천 가구(전국 가구 수 대비 16.1%)로 추산되고,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

<표 1>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및 고위험가구 비율(단위: 만 원, 배)

구분	가처분소득	가계대출	가계대출/가처분소득	고위험가구*
1분위	1,157	4,645	4.0	45.8%
2분위	2,475	6,871	2.8	32.5%
3분위	4,039	9,635	2.4	25.6%
4분위	6,046	13,132	2.2	22.7%
5분위	11,013	23,765	2.2	19.2%

\*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(DSR)이 40%를 초과하거나 자산대비 부채비율(DTA)이 100% 넘는 가구  
 자료: 가계금융복지조사(21년)

<그림 1> 1년 후 금융부채 변화 전망(N: 2,562가구)



<표 2> 부채증가 원인(N: 419가구)

구분	1순위	2순위	3순위
1분위	생활비(56%)	부채상환(14%)	사업자금(9%)
2분위	생활비(32%)	사업자금(19%)	부채상환(13%)
3분위	생활비(27%)	사업자금(24%)	주택마련(16%)
4분위	사업자금(31%)	주택마련(14%)	생활비(14%)
5분위	사업자금(18%)	주택마련(18%)	부채상환(14%)

### ○ 금융부채 변화 및 부채증가 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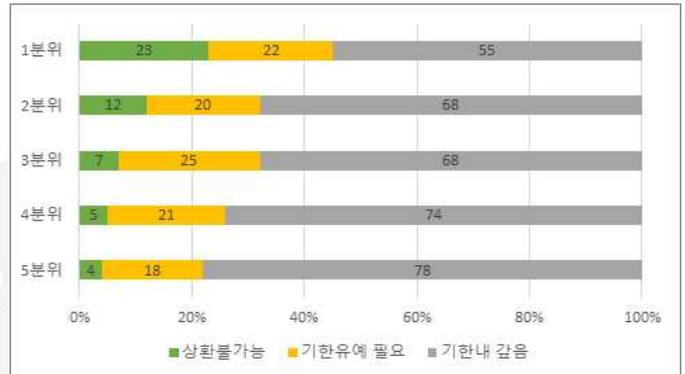
- 본고는 고위험가구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분위별 고위험가구를 추출하고, 가계부채 관련 설문결과를 분석함
- <그림 1>을 보면 1년 후 금융부채는 저소득계층에서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
  - 소득 1분위는 1년 후 금융부채는 '감소함' 43%, '변화 없음' 34%, '증가함' 23%로 응답했고, 1분위에서 5분위로 갈수록 금융부채가 감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

- <표 2>에서 부채의 증가원인으로 저소득계층일수록 생활비, 부채상환이 가장 높고, 고소득일수록 사업자금, 주택마련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됨
-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생활비, 부채상환의 응답비율이 높아 생활고와 빚을 해결하기 위해 돌려막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, 이들 위기 가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함

<그림 2> 원리금상환 생계부담 정도(N: 2,562가구)



<그림 3> 부채상환 가능시기(N: 2,562가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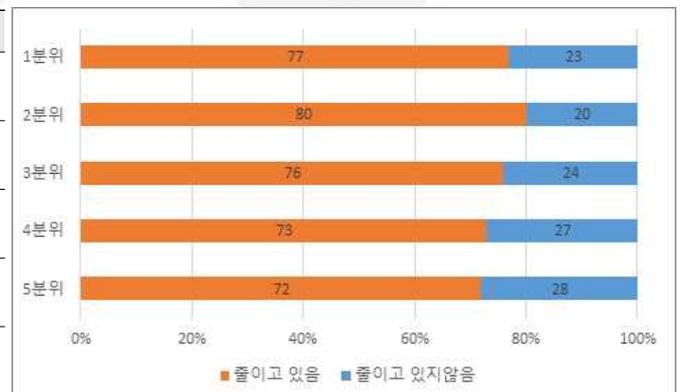
○ 원리금상환 생계부담 정도 및 부채상환 가능시기

- <그림 2>를 보면 원리금상환을 위한 생계부담이 소득 1분위에서 ‘매우 부담’ 47%, ‘약간 부담’ 40%로 전체 응답자의 87%가 생계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
-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원리금상환의 생계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
- 부채상환의 가능시기에 관한 질문에서 1분위의 23%가 ‘상환 불가능’, 22%가 ‘기한유예 필요’로 응답해 전체 45%가 부채상환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
- 1~5분위에서 ‘기한유예 필요’와 ‘상환불가능’로 응답한 가구를 전국 가구 수로 환산하면 각각 720천, 324천 가구로 총 1,044천 가구이며, 전국 고위험 가구 수의 31.6%에 해당하고, 이들 부채위기 가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함

<그림 4> 원리금상환 가계지출감소 여부(N: 2,004가구)

구분	1순위	2순위	3순위
1분위	식품·외식비(52%)	여가·문화비(21%)	저축·금융투자 (16%)
2분위	식품·외식비(41%)	여가·문화비(27%)	저축·금융투자 (21%)
3분위	식품·외식비(33%)	저축·금융투자 (32%)	여가·문화비(23%)
4분위	저축·금융투자 (32%)	여가·문화비(32%)	식품·외식비(28%)
5분위	저축·금융투자 (36%)	여가·문화비(35%)	식품·외식비(17%)

<표 3> 가계지출 감소항목(N: 1,525가구)



○ 원리금상환 가계지출의 감소 및 감소항목

- <그림 4>에서 원리금상환을 위해 가계지출을 줄이는 가구는 1·2분위에서 각각 77%, 80%로 가장 높고, 고분위로 갈수록 가계소비를 줄이지 않는 가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

- 급증한 가계부채로 소비지출이 감소하고, 총수요 감소는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를 유발함
- <표 3>을 보면 가계지출 감소항목은 1,2분위에서 식품·외식비, 여가·문화비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, 4,5분위에서는 저축·금융투자, 여가·문화비 순으로 지출이 감소함
- 앵겔지수가 높은 저소득층은 식품·외식비를 먼저 줄여 식품 소비감소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

### 3. 정책제언

#### ○ 금리폭리방지법(금리원가 공개)을 통한 은행법 일부개정으로 금리인하 유도

-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은행이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여 금리인하
  - 노웅래 의원 등 12인(2022. 6. 17.)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
  - 은행이 정보보유 측면에서 우월적 지위로 대출자에게 금리산정에 폭리를 취하는 문제해결
  - 2018년 12월과 2022년 6월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.75%로 동일한데, 신용대출 금리는 각각 3.2%, 4.5%로 산정해 은행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해 폭리를 취하여 금리산정 정보공개 필요

#### ○ 불법사채금지법 개정으로 금융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부담 해소

- 법정 최고금리 초과 시 이자계약 무효, 최고금리 2배 초과 시 대부계약 전부 무효
  - 이재명 의원 등 11인(2022. 7. 27.)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
  -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만 무효로 하여 불법대부행위 근절에 어려움
  -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,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

#### ○ 금리자동인하법 개정을 통한 채무자의 권리보호 및 금리인하 자동 처리

- 은행이 채무자의 신용상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금리인하의 의무를 부여
  - 박성준 의원 등 16인(22. 8. 10.)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
  - 현행 금리인하요구원은 금융기관에서 잘 활용되지 않은 사례가 자주 발생,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에 따라 자동적으로 금리인하 의무 부과

#### ○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고위험 가구의 저금리 대출 대환 대규모 실행

- 신용보증재단에 2조 원 출자해 20조 원 대출재원(보증배수 10배)을 마련해 고위험가구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대규모로 실행함
  - 이자감면 시 고위험 가구 비율은 27.2% → 22.1%로 감소, 630천 가구 고위험가구 탈출

####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

-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,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유통 원활

#### ○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로 금융지원책 마련

- 금융위원회는 고위험가구의 가계부채를 만기연장·상환유예를 통해 금융지원 필요
  -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에 대해 만기연장(3년)·상환유예(1년) 조치를 5차례에 걸쳐 지원함

○ 저소득층에서 생활비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가구를 위한 생계비 지원 시스템 마련

- 보건복지부는 ‘가계부채 고위험 가구 생계지원 사업’을 시행하여 소득 1·2분위 계층에서 생활비로 대출을 신청하려는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함
  -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한 저소득가구에 ‘한시 생계지원 사업’으로 가구별 50만 원 지원한 사례(2021. 6.)가 있음

○ 저소득층 가계부채 고위험가구 발굴과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

- 정부와 지자체, 금융기관 등이 연계해 저소득층 고위험가구를 발굴하는 데이터 시스템 구축
  - 부채금액, 원리금상환, 체납정보, 소득수준, 근로위기, 기타 복지관련 사업대상자 등 데이터 활용
- 고위험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지원 체계 마련
  - 자금지원, 채무조정 등 금융서비스와 연계한 생계지원, 복지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위험 가구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
  -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공동 운영하여 자금지원, 채무조정, 고용·복지 연계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, 생계비 지원이 안 됨
  -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, 금융기관 등이 연계하여 가계부채 고위험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는 종합적인 운영시스템 구축